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려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논의 필요”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與 “GDP比 국가채무 비율 50% 넘어 무분별한 재정 지출 막을 필요 있어”

野 “감당 가능 수준… 법인세 인하해 세수 결손 가중한 尹정부 책임 커”

국회가 내달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의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연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열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상임위 별 쟁점 현안을 분석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여겨 볼 만한 현안은 기획재정부에서 논의할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전 정부에서 국내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졌으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이며, 법인세를 인하여 세수 결손을 가중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를 악화시켰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를 쟁점 주제로 꼽으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향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질 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채무 상황은 세계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하다는 평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국가채무 금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 지출 구조조

정 등의 예산제도 활용 등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 이외에도 경제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가 들여다볼 사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규제 및 윤리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기를 맞아 의원과 보좌진이 합심해 아이টে임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엔 총선과 겹쳐서 지역구도 관리하고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해 더 바쁜 것 같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檢, 이재명 재소환에 “재판 지연 전략” vs “정치사냥”

(與)

(野)

검찰, 12일 조사 재출석 통보

與,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찍 끝내

野, 증거 없이 망신주기에 열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해,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사냥’이라는 입장이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 앞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검찰의 추악한 언론플레이 술책은 조사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대표 흡집 내기를 넘어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정치검찰에 묻겠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언이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정황,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조사의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며 쏘아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소환조사 역시 앞선 대장동·백련동·위례신도시·성남FC 조

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그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 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으로 ‘내 맘대로’ 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도가 났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 복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남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기국회서 교권보호 입법처리에 앞장설 것”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여야 간 몇가지 논쟁에 지연

신속한 입법 가능하도록 노력”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

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 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

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간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전교사노동조합원이자 초등 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

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당 대표께서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권회복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열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선생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차곡차곡 합의 처리하고 있다. 몇 가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현장에서 단식 투쟁 11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